

大學 入學 定員 策定은 自律化되어야

金 潤 泰

(西江大 敎職科)

1

대학 정원 정책은 정부가 대학 인구 규모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여 대학교육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정원 정책은 1960년대초부터 대학교육에 대한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정부 수립 후 5·16 혁명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적 대학 정책이 빚어낸 대학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는 대학 경비 정책 등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감독이 강화되었고 대학 정원 정책도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1970년대의 대학 개혁 사업의 추진과 1980년대의 대학의 양적 확대에 따른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대학의 정원 규모는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대학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이 대학교육 발전 정책의

수단으로서 지속되어 온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목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한 1950년대, 자유방임 시기에 발생했던 대학교육 운영의 非正常化를 되풀이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자유방임기에 대학은 난립되었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여건은 부실했으며 무절제한 교육 투자와 이에 편승한 일부 사학의 영리적 기업화 등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불만은 팽배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질적 향상과 대학가에 새 질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학의 정원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1960년대 중반에 법적 근거를 갖기 시작했고 부분적 수정을 가하면서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학 정원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교육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양적 확대를 제한하고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며, 무분별한 교육 투자를 억제하여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人力需給計劃에 기초를 두어 대학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확보는 물론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의 失業 또는 潛在失業의 예방과 실업에서 오는 사회 불안 요인을 완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 정원에 대한 통제 정책은 視角에 따라 다르게 합리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대학 학생 정원 조정 지침에는 위의 두 가지 목표가 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9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지침도에 예외가 아니다. 비록 대학 정원 책정은 단계적 자율화 계획에 따를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열별로 현재의 정원 안에서 학과의 신설·폐지 및 학과별 정원 조정과 야간 강좌 개설 학과의 주간으로의 전환만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자체 조정도 인문계 학과 정원의 자연계 학과로의 전환을 권장하면서 인문계 대 자연계 비율이 점진적으로 4:6이 되도록 자연계 학과 정원의 인문계 학과로의 개편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증원이 고려되고 있는 분야는 첨단 과학 기술 분야 등 자연계 학과와 극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 학과 그리고 소규모 영세 대학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9학년도 대학 정원 책정도 계열별로 현재 정원내의 자체 조정을 제외하고는 전과 다름 없이 정부의 통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동안 대학 정원 정책은 과대한 정원의 증가를 억제하고 대학의 質 管理를 위하여 공헌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 정원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自律 力量을 위축시켰고 대학 발전을 제약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정원 규모가 대학의 제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私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특별한 재정적 지원 없이 통제 정

책 일변도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학의 재정난을 가중시켰고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는 지적과 비판도 있다. 한때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로 대학 학생 정원령을 위배 하던서까지 비정상적 대학 운영을 했던 일부 사학의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先例는 되풀이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지원 없는 통제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해할 측면도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하여 대학 정원 정책은 여러 가지의 취약점 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정부에 의한 대학 정원의 책정은 대학에 의한 자율적 책정의 방향으로 조속히 체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에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정원 책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인력 수급 계획은 제약성이 크며, 대학교육을 오도할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인력의 공급 규모는 인력 수요의 개념, 인력의 공급원 결정, 인력의 代替性, 노동 시장의 메카니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원 책정에 있어서 인력 수요 접근은 그만큼 제약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인력 추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는 추정 오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연계 대학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인문계 대 자연계의 정원을 4:6의 비율로 조정하여 나가는 통계적 근거도 불확실하다. 산업 구조의 고도

화 추세에 따라 과학·기술계 고급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자연계 정원에 큰 비중을 두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어난 대학 정원 전체의 60%를 자연계로 책정할 만큼 인력 수요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그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투자의 확보는 가능하며, 대학교육의 수월성·효율성 면에서 타당한 정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정원 책정에서 인력 수요 접근을 강조하다보면 대학교육을 경제적 侍女로 전락시킬 위험도 있다. 이제 경제 계획의 수단으로 대학교육 계획을 보는 관점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대학교육 계획을 위한 경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지도자·전문가만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각계 각종의 전문가, 지도자와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영원한 진리나 가치를 탐구함으로써 학술 진흥과 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문적 영역 또는 학과의 증설 또는 증원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대학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 정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이에 기초를 두어 추진하려는 정부의 대학 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대학에 대한 不信이

진제되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정원의 자율화를 지향하되 대학의 자율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정부가 정원을 책정한다는 입장이 보인다. 즉, 정부는 대학별 전체 정원 또는 계열별 정원 규모만을 1단계로 책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화 단계에 가기 이전의 중간 단계에서는 대학 자율 협의 기구를 활용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전문적 판단 및 자율적 협의에 의해 대학 정원을 책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大學 評價認定制度의 방향과 그 전망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학 정원은 정부가 계속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자율화에 이르는 단계가 이렇게 신중한(?) 것을 보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학 정원 정책은 1950년대 자유방임기에 빚어졌던 대학교육의 비정상화와 일부 사학의 부조리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대학 여건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대학 체제 내외의 환경이 '50년대와 같은 학원의 부조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사회의 각 부문에 자율화·민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지성인의 공동체인 대학 사회의 자율화를 막는다는 것은 시대 조

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간 자율 경쟁 체제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면서 대학 정원 정책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는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양적 통제보다는 국민의 교육열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고등교육의 개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5년에 경제기획원이 발행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자녀교육 기대 수준을 보면, 1982년 현재 전 가구주의 71%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며 딸의 경우는 55%가 대학 진학을 바라고 있다. 1987년 현재 대학생 수는 총 136만 2천 명에 달한다. 이 통계에 개방대학(최근 산업대학 등으로 개편)과 한 국방송통신대학 재적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은 모두 154만 9천 명에 달한다. 적령 인구에 대한 실제 대학 취학률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Martin Trow의 고등교육 체제 분류 방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는 확실히 대중화 단계에 있다. 학생 집단은 異質化·多様化되었으며 대학교육의 성격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 우리의 대학은 정선된 우수 학생들만 다니던 종래의 엘리트 대학 체제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집단을 감안하고 그들의 발달 과업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 기능에 대해서는 보통 연구·교육·사회봉사 등을 들고 있다. 엘리트 단계의 대학에서는 하나의 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양한 수준의 대학이 위의 기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결국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대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는 수요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양적 통제보다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네제, 수도권 지역 인구 억제 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영세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고려한다는 방침은 설득력이 약하다.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의 증원을 허용하지 않을 때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방침을 그 이유로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일관성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과연 대학 정원이 수도권 지역 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대학 정원은 정치적 전환기일 때 대폭 증원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증원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컨대, 1980년 소위 국가보위비상

대책상임위원회가 발표한 教育正常化 및 過熱課外解消方案에 의해 교육 여건이 비교적 좋은 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81학년도 대학 정원이 대폭 증원되었고 '88학년도 입시에서는 졸업정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도 입학 정원이 증원되었던 것이다. 이 양년도는 모두 정치적 변혁기로서 그 이전까지 억제되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이 이 시기를 기해 각각 증원되었다는 사실은 대학 정원 정책에 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인구 억제책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억제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또 소규모 영세 대학 증원 정책도 그러하다. 원천적으로 영세 대학의 발생 과정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들 대학은 정부의 지방 대학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설립된 사립대학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설립을 서두른 결과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대학 운영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영세 대학의 증원을 고려하는 방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 당초에 엄격한 심사 와 통제를 가하였더라면 그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하였을지도 모른다. 우선 대학 간판만 달고 후에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원을 늘려줌으로써 영세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해서도 아니될 것이다.

3

향후 대학 정원은 정부에 의한 책정이나 통제보다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학의 自律化를 촉진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대학 정원은 인력 수급상의 문제로 감축하거나 통제해서는 아니된다. 인력 수급 계획상에도 제약성이 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등교육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희망하는 고등교육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재수생의 누적 등은 고등교육 기회가 총량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대학 또는 인기 학과에 수험생이 집중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양적 통제로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평등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대학간 경쟁의 원리를 적절히 구현한다고 하면 수월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기회의 균등은 단순히 교육 기회량의 개방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그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할 때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대중화되면서 대학교육 인구는 다양

해지고 이질화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집단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희망하는 대학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외국에 유학시키거나 앞으로 국내에 설치될지도 모르는 외국 대학의 분교에 입학시키는 현상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학도 국제 경쟁을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향후 정부는 대학 학생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대학 운영의 자율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이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조건의 정비 정도에 따라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중화 단계의 고등교육은 질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신택은 수요자에게 달려 있다. 高價의 良質의 교육을 택하느냐 아니면 값싼 저질의 교육을 취하느냐는 수요자의 능력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학간 자유 경쟁 체제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평등 이념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미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넘어서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체제는 상이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형태나 질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며, 특히 사립대학 정, 학과 등을 자율적으로 책 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실례는
은 학생 정원, 등록금, 교육과 정하면서 평등 이념과 수월성 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 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協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 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協의회의 소정 양식 '教授資源人誌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內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